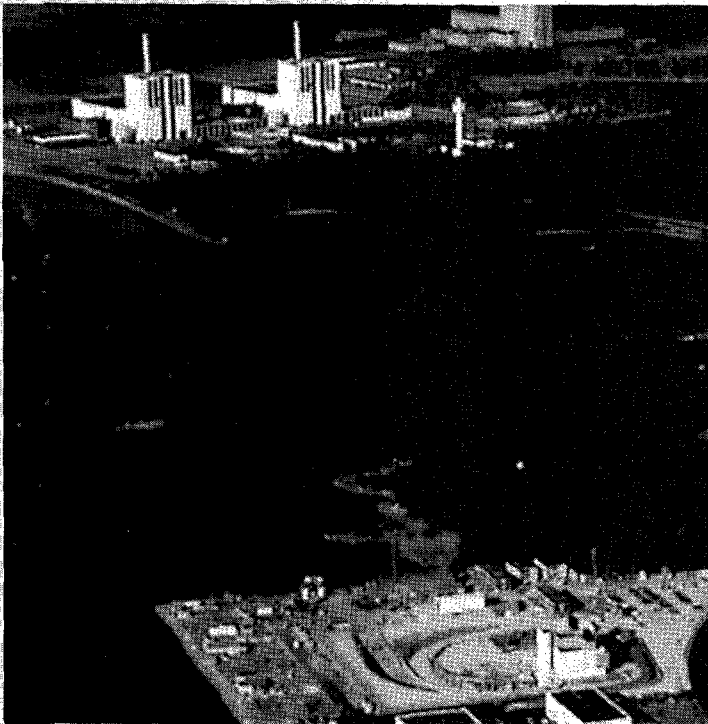


논 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입지선정

原子力先進國의 實態와 國內 展開方向



스웨덴의 포스마크처분장이 있는 해안의 풍경

조 흥 섭
한겨레신문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가 다시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0년 안면도 사태 이후 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터 선정 원칙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반핵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정부의 정책은 지지부진했다. 정부 안에서 조차 폐기물 처분장 터 마련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견이 있었는가 하면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하지만 폐기물정책이 표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정책의 희망적인 변화

새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면서 그 폐기물 문제에 대해 임시저장 이외의 대책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이해사업」에 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등 폐기물 처분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이뤄진 국내 5개 중앙일간지와 4개 포항지역 일간지 기자들의 일본, 스웨덴, 프랑스 핵폐기물 처분장 시찰은 그 일환이었다. 이들 3개 나라는 일찍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해 온 원자력 선진국으로 원자력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이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고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폐기물시설을 위한 터의 선정과정, 지역주민과의 관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과 제도 등은 우리의 직접적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방문한 세 나라의 폐기물정책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짧은 방문일정 때문에 이 글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폐기물시설 홍보담당자와의 인터뷰와 홍보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여기에 일부 환경단체 관련자의 의견이나 자료를 추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일본의 폐기물 관리시설

로카쇼무라는 중저준위 폐기물 매립장과 우라늄 농축공장, 사용

후연료의 재처리공장 등 핵연료 사이클 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일본 원자력시설의 메카이다. 도쿄에서 약 7백km 북쪽, 일본 본섬의 북쪽 끝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 어귀에 자리잡은 로카쇼무라는 인근에 미사와 미국 공군 전략기지가 있고, 원자력선의 모항인 「무츠」와 대규모 원전단지인 히가시도리가 바로 곁에 있어 원자력의 도시라는 냄새를 물씬 풍긴다.

로카쇼무라는 또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을 휩쓸었던 반핵운동의 물결이 원자력사업 추진 세력과 정면대결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로카쇼무라로 가는 길목에는 미사와 기지 공군기의 야간비행 소음을 항의하는 포스터와 함께 「우라늄 농축으로 밝은 내일을」이라는 이 지역 원자력시설의 주관 기업인 일본원연(주)의 홍보용 간판만이 곳곳에 나붙어 있을 뿐, 일본 전역을 떠

들썩하게 만들었던 반핵운동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핵 논란의 승부는 이미 나 있었다. 핵시설은 이미 들어서 있었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이주도 마무리된 상태이다. 지난해 4월부터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42개 원전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들여 현재 2천여 드럼을 처분했다. 재처리공장은 2000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착공해 10여대의 대형 크레인들이 터 고르기 작업에 한창이다.

로카쇼무라는 원자력시설에 앞서 공업단지 입주로 흥역을 치른 마을이다. 아오모리현은 일본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현이다. 특히 로카쇼무라는 태평양에서 일년 내내 불어오는 소금기를 머금은 찬 바람인 「아마세」의 상습 피해지역이어서 주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일제 때는



일본 로카쇼무라처분장의 건설현장 모습

군마를 기르기도 했고, 일본 정부가 개척농민을 이주시켜 목장을 일구기도 했다.

70년대 초 아오모리현은 낙후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기로 했다. 도쿄 등에서 공해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떠올라 새로운 입지를 찾던 기업과 과수지대인 이곳에 중화학공단을 세워 지역개발을 꾀하려는 지역당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공단건설 찬성과 반대세력으로 극심한 분열사태를 맞았다. 개발 논쟁은 1만8천명의 주민이 집단 이주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때마침 닥친 석유파동으로 공장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공단조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11만k들이 원유저장고 51기로 이뤄진 석유비축기지만이 들어서 있다.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 비어있던,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반대 주민이 이주된 땅이 나중에 원자력시설의 유력한 후보지가 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재처리 공장의 후보지마다 주민의 반대에 시달리던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로카쇼무라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은 것은 85년의 일이었다. 1조엔이 넘는 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요 동기였다. 반대 움직임은 오히려 로카쇼무라 인근 지역과 도쿄 등 대도시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

어나자 로카쇼무라에서도 반대여론이 드세졌다. 원자력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의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다. 쌀 값 인하와 영농후계자 부족, 그리고 미국의 쌀 수입자유화 압력 등 어려운 상황이 겹쳤다.

로카쇼무라의 원자력시설은 지역차원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았다. 농축, 처분, 재처리 등 핵주기시설이 모두 들어서면 이 곳은 반핵운동 세력의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각종 집회가 열렸다. 한국의 운동가들이 와 안면도 사태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핵연 사이클 저지 1만인 소송」 등의 다채로운 운동도 조직됐다. 자연히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지역단위의 각종 선거에서 원자력시설의 찬반후보들이 나와 싸움을 벌였다. 결국 로카쇼무라의 핵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표면적으로 91년 2월 아오모리현 지사선거와 같은 해 12월 현의회 선거에서 추진파가 승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로카쇼원연 홍보센터의 가토(67) 관장은 이런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도카이무라 등 국내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얻었고,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들

로부터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발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핵 논쟁을 가라앉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자력시설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오부치라는 큰 부락이 있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에도 사람의 접근을 막는 철조망 등 보안시설이 눈에 띄지 않아 특별히 위험한 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다카기 진자부로 소장은 조금 다른 의견을 펼친다. 그는 「로카쇼무라가 핵시설로는 일본에서 가장 부적합한 곳」이라고 단언한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많이 나며, 미사와 공군 기지가 민첩해 있어 비행기 충돌이나 기체 이상으로 인한 폭탄투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거패배 이후 반대운동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며 오는 12월 로카쇼 시장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반핵파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선거를 다만 반핵 캠페인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로카쇼무라에는 매년 10월 9일 「반핵의 날」 행사가 열린다. 농축 공장 착공일을 기념해 20-30명의 반핵운동가가 모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로카쇼무라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반대운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표적은 중저

준위 폐기물처분장이 아니라 핵 무기 개발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재처리 시설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오모리현 의회 의원들이 재처리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공개질문을 낸 것이나, 일본원연(주)의 홍보책자가 거의 대부분

절반은 수력, 나머지는 원자력이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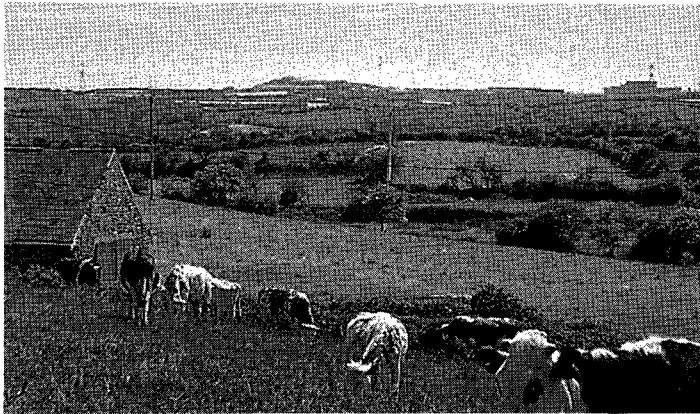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자력 정책이다. 지난 80년의 국민투표와 국회의 결의를 통해 스웨덴은 당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원전 12기를 오는 201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원전사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불안이 폭발한 결과는 아니었다. 1950년대 마르케빈 원자로를 건설한 뒤 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화력발전소로 바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유를 원료로 쓰는 원전을 지은」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다.

국민투표를 하기 전인 1973년에는 의회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2년간 잠정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원자력에 대신할 에너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8천명이 참여하는 연구집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반대운동의 비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듣고 솔직하게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를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해저동굴 방식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포스마크 단지는 스톡홀름에서 1백60km 북쪽의 발트해변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해저동굴 처분장 외에 흰색 건물에 달린 사무실 빌딩처럼 생긴 3기의 가압경수로형 원전과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알아보기 위해 건설한 대규모 생물시험 해역이 있기도 하다.

동굴처분장은 4년 남짓한 공사 끝에 지난 88년부터 폐기물을 받기 시작했다. 건설비는 무려 1억



프랑스 라망쉬처분장 인근에 있는 목장

의 내용을 재처리공장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난다. 일본 원자력산업의 마지막 숙제는 결국 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폐기물 관리시설

스웨덴의 전력 정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화력발전소를 하나도 짓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수력발전을 늘리지 않고 있다. 전력의

결정했다. 지난 91년 의회는 95, 96년으로 잠혀있던 원전 2기의 1단계 폐쇄 결정을 취소했다. 물론 원자력에너지를 모두 대체에너지로 대신한다는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원칙에 조건이 붙었다.

대체에너지는 발전단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대체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스웨덴의 딜레마이다.

스웨덴의 독특함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다. 지난 80년의 국민투표가 전 해에 일어난 드라마일섬

달러(7백40억원 상당)가 들었고 연간 운영비는 약 27억원에 이르는 비싼 시설이다. 처분장 관계자는 「동굴처분장이 천층처분 방식보다 특별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차이는 동굴처분을 하면 폐쇄가 끝난 뒤 4~5백년 동안 계속돼야 하는 감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해저동굴처분방식을 택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폐기물의 해상수송 시스템은 어찌보면 너무 순진하다 싶을 만큼 신중했다. 특수 운반선 건조에 착수한 것은 지난 83년, 요즘 시세로 2천만달러 이상을 들었다. 그 후 85년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10년 동안을 안전성 시험에 바쳤다. 1백90번의 안전성 시험에 21만마일을 뛰었다. 이 배는 현재 「떠다니는 전기관」으로 이용된다. 4년 전부터 여름 석달동안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전국의 20개 항구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했다. 그 동안 이 배를 탄 사람은 인구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에 이르렀다.

스웨덴 원자력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용후연료의 처분문제이다. 이 나라는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또 「스웨덴에서 나는 폐기물은 다른 나라에 보내지도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용후연료는 10만년 동안 엄중

히 관리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일 뿐이다. 이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스웨덴 남부 오스카섬원전 터의 중앙집중식 저장소에 85년부터 임시 보관되고 있다. 스웨덴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회사(SKB)는 이들을 30~40년간 임시저장하면서 열과 방사능을 줄인 뒤 깊은 암반속에 최종 처분할 계획이다. 문제는 터 확보이다. 현재 북부 램랜드 등 인구밀도가 낮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포함해 다섯 곳의 후보지를 놓고 지방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B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책임자인 구스타프손(55)도 정작 어려운 것은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중저준위 폐기물 터 확보가 쉽게 이뤄진 데는 스웨덴의 원전사업이 100% 민주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원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도덕적 책임 아닌가.」

프랑스의 폐기물 관리시설

프랑스는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반핵운동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확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첫 처분장인 라망쉬 처분장은 1969년부

터 가동돼 왔으나 지질구조가 좋지 않아 주로 지상에 폐기물을 쌓다보니 포화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80년부터 2차 처분장 터를 찾아 나섰다. 국립핵폐기물관리기구(ANDRA)는 일을 쉽게 생각했다. 지역민 몰래 프랑스핵연료회사(COGEA) 소유의 페 우라늄 광산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터와 원자력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쉽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수상의 재가도 비밀리 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결정과정에서 따돌림받았다는 데 분노가 컸다. 게다가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전문가에 맡겨 수행한 조사에서 이 지역 화강암 암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라 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는 처분장 건설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테랑은 당선됐고 ANDRA는 패배했다.

지난해 초부터 폐기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로브 처분장은 ANDRA가 이런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선정한 곳이다. 로브처분장은 파리에서 동쪽으로 센강을 약 2백km 가량 거슬러 오른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로브의 나지막한 산림보호지역의 숲을 베어내고 들어서 있다. 84년부터 새로 폐기물후보지 확보작업을 시작한 ANDRA는 지질조건 등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 로브를 포함한 3개 후보지와 1개 자원지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기 6개월 전인 85년 10월 정부는 로브를 제2 처분장 터로 확정 발표했다.

원자력시설 터 선정과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보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시장, 환경운동가, 노조원, 기업가 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하는데, ANDRA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용을 가지고 원자력시설이 안전한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지를 나름대로 알아본다. 로브 주민들은 이 조직을 이용해 라 망쉬 처분장 주변 주민을 만나 「가축이 기형 새끼를 낳는가」 또는 「포도주 생산지로서의 가치를 잃지는 않는지」 등을 직접 돌아보고 확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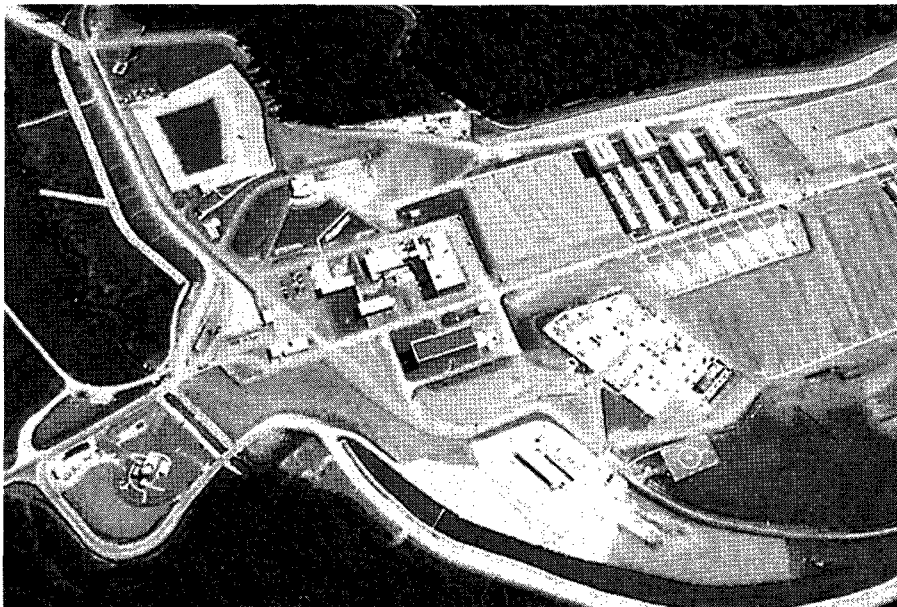
수 있었다. 또 주민들은 독립적인 과학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3개의 작은 부락으로 이뤄진 로브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쇠퇴해 가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처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인구가 불어나기를 바랐다. ANDRA는 지역발전기금과 지역주민의 고용을 통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켰다. 지역의 지주는 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에 협력했다. 주민들이 처분장을 받아들여게 된 핵심적 배경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로브에서 20~30km 떨어진 곳에서 오히려 반대운동이 심했음은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프랑스의 독특한 절차에 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 86년 11월 이뤄졌다. 결과는 처분장 건설에 긍정적인 것이었으나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왔다. 처분장이 들어서느라 베어낼 숲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과, 철도로 인근 역까지 폐기물을 날라온 다음 차량으로 처분장에 운반하는 방식을 직접 처분장까지 철도로 운반하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첫번째 요구는 ANDRA에 의해 받아들여져 처분장과 같은 크기의 숲이 따로 조성될 예정이나 두 번째 요구는 묵살됐다.

재처리를 하고 난 고준위 폐기물은 프랑스에서도 큰 골칫거리이다. ANDRA는 뇌비보병 등 4곳의 후보지를 모색해 놓았으나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닥쳤다. 지난 90년 수상은 고준위 폐기물 터 확보를 위한 지질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



프랑스의 제2처분장인 로브처분장

했다. 이듬해 말 통과된 법은 후보지역의 지질조사를 할 때는 독립된 두 개의 기관이 따로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ANDRA는 후보지 선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선정과정에는 손을 댈 것을 요청 받았다.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정부는 최근 폐기물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뼈대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사업추진 일정을 협의하는 등 이제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 확보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 정부에 들어와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사업이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결과이다.

원자력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자력시설의 건설은 기술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아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터를 선정한다」는 원칙만 정해 놓고 실무는 과학기술자들에게 내맡겨 놓은 상태이다. 정책결정가와 정치가들은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원자력시설의 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답판을 지은 뒤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처는 「주민 절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처분장 터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을 처분장 터로 선정하든 반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가 적극 협조한다면 과거치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는 원자력계의 절박한 사정이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원자력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터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2006년까지 새로 지을 18기의 원전과 당면한 핵연료 공장의 터는 어떻게 구하겠느냐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정부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프랑스의 예에서 처럼 주민들이 직접 견학하고 만남 등을 주선하고 당국은 비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과학자들에게 환경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길도 있다. 이 방법은 이미 대규모 환경분쟁에서 적용돼 분쟁해결에 기여한 바도 있다.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싸매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강한 방사능과 고열로 10만년 이상을 엄중 보관해야 하는 이 폐기물은 안전성과 핵무기 원료로의 전환 위험 때문에 선진국에서 반핵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연료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중의 하나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사용후연료도 「중간 저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모순적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처리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사용후연료는 스웨덴이나 미국이 하는 것처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국내에서 재처리를 포기했을 뿐 외국에서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들여오는 것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더라도 고준위 폐기물은 생겨난다. 재처리를 해주는 나라는 처리한 플루토늄과 함께 폐기물도 의뢰국에 돌려주기 때문이다. 결국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분해 관리할 것인가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